

월요광장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음악 예능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이 지난주부터 네 번째 시즌을 새로 시작했다. '비긴 어게인'은 존카니 감독이 만든 동명의 원작 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작 영화의 기본 줄거리는 각자 심각한 좌절과 절망을 겪고 있던 주인공들이 음악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능동적으로 삶의 희망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다시 시작한다'는 뜻의 '비긴 어게인'이라는 제목은 실패한 음악 기획자인 남자 주인공 댄(마크 러발로)이 무명의 뮤지션인 여주인공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를 만나 음악적 소통과 관련한 초심(初心)을 되찾아 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영화 '비긴 어게인' 속의 댄이 그레타와 함께 뉴욕의 거리 곳곳에서 야와 연주 녹음을 하는 인상적인 장면들은 음악 예

능 '비긴 어게인'에서 한국 뮤지션들에 의한 실제 길거리 공연(버스킹) 장면으로 재연되어 왔다. '시즌3'까지 이 길거리 공연들은 모두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행해졌다. 한국 내에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악인들('시즌1'의 경우 윤도현, 이소라, 유희열)의 '초심 찾기 프로젝트'를 위한 익명성의 필요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작 영화 속 서구적 거리 풍경(무엇보다 서양인 청중)을 모방적으로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한 의도 또한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 시작한 네 번째 시즌은 이전 시즌과 달리 '한국'에서 촬영된다. 이 때문에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제목을 썼는데, 이는 단순히 촬영 장소를 특기하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즌4'의 해외 로케이션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역발상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 불황과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한국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치유)의 체험을 준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결국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는 프로그램 제목은 '하이팅 코리아'와 비슷한

의미로 새겨진다. 길거리 공연이라는 프로그램 콘셉트에 비해 과도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국(Korea)을 가리키는 'K'라는 알파벳이 니셜이 곳곳에 붙는 한국 대중문화 전반의 국가주의적 정서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유럽에서 촬영된 '시즌3'까지의 '비긴 어게인'에도 이러한 국가주의적 정서는 매순간 작동하고 있었다. 서양인 청중에게 '한국 무의식적 호기심의 충족(한국 음악에 감동하는 서양인들의 모습)이 이 프로그램의 대중적 인기를 이끈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음악 예능 '비긴 어게인'이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문화적 함의를 갖게 될 듯하다.

유럽의 이국적 거리 풍경을 배경으로 해외여행의 환상과 익명성이 안겨다 주는 자유에 시청자들이 낭만적으로 감정을 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전 시즌들이 비하, 인적이 끊긴 활랑한 인천 국제공항 로비에서 첫 버스킹을 시작한 '비긴 어게인 코리아'의 뮤지션들은 좀처럼 낭

만의 투입을 허락지 않는 이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여전히 라이브 음악의 감동이 있고, 자동차 안에서 공연을 즐기는 '드라이브인 공연'과 같은 여러 대안적 공연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도 했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무엇보다 줄을 서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의 안전 수칙 절차를 거친 뒤 객석 2m 거리 두기를 위해 띄엄띄엄 놓인 매트에 질서 있게 앉은,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하고 있어 표정을 알 수 없는 청중들은 더 이상 자유로운 길거리 공연의 청중일 수 없었다.

지역의 관점에서 주목할 점도 있다. '비긴 어게인 코리아'는 인천과 대구를 필두로 한국의 여러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전 시즌에서 한국의 뮤지션들이 유럽의 청중들로부터 평가받는 느낌이 적지 않았다면, 이번 시즌에서 한국 내 지역 청중들과의 관계 맺기가 어떻게 연출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유럽의 공간에서는 익명이거나 무명이었을지 모르지만 한국 내에서는 이미 유명한 인물들이나 그들이 과연 무엇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골목 상권까지 파괴되는 대기업처럼 지역의 거리까지 방문해 오는 저 '유명 버스커'들이 말이다.

2040 광주도시계획 이렇게

초고층 건물 시대의 광주 도시경관 전략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한국조경학회 회원

우리나라 경관법이 제정된 2007년보다 10여 년 앞선 1990년대는 광주를 포함한 국내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경관 계획 수립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도시경관 관리가 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30년은 의미 있는 간격이며, 마침 2020년은 그 마디의 시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30년 미래인 2050년의 광주 도시 경관을 그려보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하나의 방법으로 1990년에 목표했던 2020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자. 결론은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 30년 이상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격정이 앞선다.

1990년대 초반, 도시 주변 보전녹지나 산자락까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무등산과 같이 시민들에게 공유되는 경관 자원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그에 대응한 경관 관리 요구가

광주의 도시 경관 이슈였다. 결과는 이미 드러난 바와 같다. 기대했던 경관 관리는 실패했고, 도시를 만드는 다른 요인들이 우선되어 아파트로 대표되는 건설의 풍경이 광주를 대표하는 지배적 경관이 되었다.

계획이 현실 문제에 대해 항상 올바른 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기에 계획에는 항상 평가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계획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게을리하거나, 벗어난 예상을 회고하기 싫어 집짓 몽케버린다면 그 계획은 목적달성 여부를 떠나 이미 실패한 것이 된다.

도시 경관 계획은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개발을 규제해 환경을 지키는 것에만 목표를 두지는 않는다. 과거부터 도시 기반이 되어왔던 자연, 지형, 풍토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정서적 공유로부터 맥락을 찾는 것이 경관 계획에서는 더 중요한 본질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가지 건설을 통해 도시를 가꾸어 오면서도 역설적으로 도시 경관 만들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도시 주변 산 경관을 대신해 고층 아파트 스카이라인이 지배적이 된 것은 광주시 도시 경관 만들기의 가능

성을 차단한 경관 훼손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2020년 현재 광천동의 호반 서밋(158m, 48층)을 필두로 높이 100m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초고층부 기준)와 주상 복합 건물은 8개소이며, 앞으로 2년 안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 중인 100m 이상 건물이 9개, 현재 승인된 건물이 5개이다. 상업용 건물과 달리 적어도 2동 이상의 주상복합 단지는 높이뿐 아니라 면적으로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전의 조망 차단 규모와는 클래스가 다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개방감을 일거에 바꾸는 이러한 변화는, 20년간 줄곧 광주의 가장 높은 건물 순위를 차지해 온 양동의 KDB생령 빌딩(134m), 동구대인동 광주은행(94m), 광주광역시청(85m)과 비교할 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초고층화하는 현상을 실감케 한다. 여기서 100m 표고는 1990년대 도시 경관 이슈에서 조망 보호 기준이 되었던 보전녹지 표고와도 일치한다. 무등산을 비롯해서 도시 주변 개발 여지의 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 높이에 그치지 않는 연관성이 존재했던 것이다. 지금 도시 맥락이 되어왔던 주변 산 경관보다 초고층의 스카이라인이 도시의

진면목을 대신해 등장한 것이다.

다른 대도시들과 비교해보면 광주 초고층 건물 수나 높이에서 확실히 낮은 수준에 머물지만 그 이유를 무등산 조망 규제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사람이 사는 공동체를 건설 상품으로 취급하며, 타자의 시선으로 낙후라는 굴레를 씌우는 평가는 광주시민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불편한 내용이다.

그렇다고 해서 초고층화면, 혹은 될 것이 뻔한 경관을 어떻게 되돌리는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른 가능성을 통해 도시 경관 회복을 꿈꾼다면, 경관에 대한 관심을 시각적인 것에서부터 시민 문화 활동과 도시의 활성화로 돌리는 전략적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뉴욕 맨하탄의 마천루군 아래에서는 오히려 고층 건물이 보이지 않고 즐겁고 활력에 찬 도시가 구가되듯, 늘어나는 초고층 건물군에 대한 바람직한 도시 경관 만들기는 접근, 도시가 대형 블랙으로 구역화되어 접촉이 빈번해야 할 도시 활동을 방해하는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입체적 경관 만들기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용도의 혼함을 통한 사람들의 활기만이 도시를 이루는 부분들에 적절한 구조와 형태를 부여한다"고한 제인 제이콥스의 지적을 경관적으로 해석해 보자.

영산강 신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다



이진영 ㈜화이건설-해솔아스콘 부회장

수 사업을 하였다. 이를 발판 삼아 강변도로 보충 공사에 나서 총 길이 51.9km 중 나주 영산에서 무안 몽탄까지 34km 구간이 지난 3월 처음 개통됐으니 참으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 또 하나 경사스러운 것은 지난 5월 20일 '역사문화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산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마한 문화권이 폭넓게 연구되고 개발될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마한 시대는 문자 활용이 없었던 시기라 그 문화를 알기 위해선 고분군 발굴 조사 연구가 필수이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때 특별법을 통해 연구 개발 복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그동안 흔히들 고대 마한과 가야를 배제한 채 삼국시대대로 부르는 잘못된 역사 인식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호남의 고대 역사의 뿌리가 영산강 유역의 마한에서 태동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그 중심지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도록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지방도 801호선 중 일정 구간의 격(格)을 높여 국지도로 승격시키고 이와 연계해 영산강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옹호 고분이 있는 나주 공산-다시 간 굽은도로와 교량을 가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접적인 영암 시종 대동리의 독특한 쌍무덤과 그 주변에 있는 20개의 고분군에 대한 연구 조사도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연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제는 전문가 총원과 장단기 계획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산다는 말이 있듯이 대다수 세계 도시는 강, 호수, 바다를 끼고 있다. 영산강은 총 길이 203.53km, 유역 면적은 3563km에 달한다. 지금으로부터 1000여 년 전인 고려 6대 왕인 성종(983년) 때 나주목(牧)으로

지정된 이후 나주는 전국 12목 가운데 호남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조선 건국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은 저서 유부노서(諭父老書)에서 나주는 '부흥의 땅'이라고 했다. 그 예언이 적용하듯 혁신 도시가 영산강변에 들어섰고 한전공대 설립 등으로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과 함께 이룩되었고, 중국 문화권 역시 황하의 덕이다. 강을 끼고 있는 세계 도시 중 수변 공간을 잘 이용하여 세계 명불로 만든 대표적인 지역은 파리(센강), 런던(템즈강), 뉴욕(허드슨강) 등을 꼽고 싶다. 한국도 변역의 상징 서울에 한강이 있었기에 수도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호남의 문명 역시 영산강의 영향으로 이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영산강의 수변 경관과 강변도로 관리에 힘쓰는 한편 마한 문화에 대한 연구 개발을 서둘러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社說

5·18 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간다. 하지만 기록물들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데다 전산화를 통한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18 기록물은 연구 기관과 국가 기록원 등 국가 기관, 광주 지역 5·18 관련 기관 등에 산재해 있다. 광주에서는 5·18기념재단이 2만 5000여 권, 전남대 5·18연구소 2만 904권,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은 5만 1387여 권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필요성은 지난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당시부터 제기됐다. 이에 따라 '5·18 아카이브'를 설립해 디지털화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여태껏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역 5·18 기관들이 저마다 기록물의 전산화에 착수했지만 어느 한 곳도 완성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자료의 분류 기준과 작업 양식이 달라 호환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느 기관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뒤늦게 광주시가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관 기관 5·18 기록물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진행하기로 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때 지금도 광주 지역 5·18 관련 기관들의 수장고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자료들이 수천 권에 이른다고 한다. 광주시는 이들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적으로 공인받게 된 계기는 관련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다. 이처럼 소중한 기록물들을 전산화해 통합 관리하는 것은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때 지금도 광주 지역 5·18 관련 기관들의 수장고에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자료들이 수천 권에 이른다고 한다. 광주시는 이들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전산화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난개발 방지 조례 왜 또 개정하려 드는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1년 전에 만든 조례를 갑자기 왜 바꾸려 드는 것일까. 화순의 한 국회의원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신재생에너지 거리 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의회 이모 의원이 최근 풍력발전소 이격 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 239회 정례회'에 상정한 상태라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발전시설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한 거리 제한 기준을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 2km 이내에서 700m 이내로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다. 또 10가구 미만 거주하는 마을의 경우 기준에는 1.5km 이내에는 풍력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지만 개정 조례안은 500m 이내로 완화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정부

의 탈원전 정책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대 보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완화해 관련 시설을 설치,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8년부터 모후산 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오고 있는 동북면 주민들은 '주민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 편의만 챙긴 조례안'이라며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군의회가 사업자 입장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는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은 타당해 보이는 데 화순군이 1년 전에 만든 조례안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군의 정책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당시 소음 및 전자기파 피해 발생 우려, 환경 파괴 등을 감안해 풍력발전소 허가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논의되면서 여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 기본소득제는 '재산·소득이나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Andre Gorz)를 필두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노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최근엔 '사피엔스'란 저서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과학기술의 극적인 발전으로 인류의 대부분이 '무용 계급'(Useless Class)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라리에 따르면, 최근까지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각각의 개인이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국가는 전쟁터에서, 공장에서, 투표소에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 '권총을 쥐거나 레버를 당기고 투표를 할

수 있는 한 쌍의 손들에 저마다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그리고 다가오는 세기에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최첨단 과학기술이 등장하면서 대다수 일반인들은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잃게 된다. 이는 개인 소득의 상실로 이어져 결국엔 거대한 규모의 '무용 계급'을 형성하게 되고, 정치인들은 이들에게 '똑같은 표'를 주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이 같은 하라리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기본소득은 결국 대

'무용 계급'

다수 인간이 경제적·군사적·정치적으로 '무용 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암울한 미래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실제로 기본소득제는 핀란드·스위스 등지에서 한때 시도됐고 미국·영국 등지에서도 일부 도입이 검토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이제야 시작됐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대량 도입은 미래 디스토피아에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든 기본소득제 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철기 정치부장 redplane@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세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구 220-0551 (FAX 222-0195)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